

與 ‘텃밭’ 광주·전남 5곳, 공관위 심사 늦어지는 이유는?

광주 서갑·서을, 여수갑, 순천, 광양·곡성·구례

여성전략공천·유력 후보 경쟁력 놓고 ‘고심’

더불어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가 광주·전남지역 18개 선거구 중 13곳에 대한 예비후보 심사결과를 발표했다.

나머지 5개 선거구는 여성 후보 전략공천 등을 두고 막판까지 고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는 18일 4·15 총선 후보 선출을 위한 심사 결과를 추가로 발표했다.

광주는 동구남구갑, 광산구갑, 광산구을 등 3곳, 전남은 영암·무안·신안군과 고흥·보성·장흥·강진군 등 2곳이 경선지역에 포함됐다.

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은 전국의 단수 후보자 선정지역 8곳 중 유일한 원내 지역구에 포함돼, 재선인 이개호 의원이 현역의원 가운데 첫 단수 후보에 올랐다.

동남갑은 최영호 전 광주남구청장과 윤영덕 전 청와대 행정관으로 압축됐고, 광산갑은 이석형·이용빈, 광산을은 민형배·박시종 예비

후보가 맞붙는다.

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은 김승남·한명진 예비후보, 영암·무안·신안은 서삼석 의원과 백재숙 예비후보가 경선을 벌인다.

1차 심사에서 광주는 동구남구을(김해경·이병훈), 북구갑(정준호·조오섭), 북구을(이형석·전진숙) 등 3곳, 전남은 해남·완도·진도(윤광국·윤재갑) 1곳이 경선지역으로 발표됐다.

2차에서는 전남 나주시·화순군

(김병원·손금주·신정훈), 목포시(김원이·우기종), 여수시(김회재·정기명) 등 3곳이 확정됐다. 이에 따라 광주·전남에서 민주당 후보군이 확정되지 않은 선거구는 광주 서구갑과 서구을, 전남 여수갑, 순천, 광양·곡성·구례 등 5곳이다.

광주 서구갑은 지난 2018년 재보궐 선거로 당선된 송갑석 의원이 유일하게 출사표를 던진 가운데 당에서는 추가로 후보를 공모중이다.

서구을의 경우 양향자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과 이남재 전 이낙연 전남지사 정무특별보좌관, 고삼석 전 노무현대통령 청와대 행정관이 각축을 벌이는 가운데 여성전략공천이 논의되면서 공관위가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구을은 7선에 도전하는 천정배 대안신당 의원이 베티고 있어 당에서는 막판까지 경쟁력 있는 후보 찾기에 고심하는 모습이다.

전남 여수갑은 당내에서 가장 유력후보로 거론되는 주철현 전 여수시장의 재임시절 상포지구 인허가 과정에서 특혜의혹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발목을 잡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강수현 전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 국가안보실 행정관, 김유화 현대통령직속국가균형발전위원회 국민소통 특별위원, 김점유 전 대통령소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자문위원, 조계원 전 이재명 경기도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해찬 대표가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정책수석 등 예비후보들은 현역 인 이용주 무소속 의원과의 경쟁에 승리를 장담할 수 없어 지체된다는 후문이다.

순천은 이정현 무소속 의원이 수도권 출마를 선언해 무주공산인 가운데 분구 가능성 때문에 막판까지 후보군 확정을 미뤄지고 있다.

선거구획정에서 순천이 분구될 경우 한 곳은 민주당 ‘인재영입 4호’인 소병철 전 법무연수원장의

전략공천이 유력하다. 현재 선거구를 유지할 때는 김영득 팔마청백리 문화재단 이사장과 노관규 전 순천시장, 서갑원 전 국회의원, 장만채 전 전남교육감 등 4명이 예비후보 중 압축할 것으로 보인다.

광양·곡성·구례는 민주평화당을 탈당한 정인화 의원이 ‘호남 통합신당’에 합류하지 않고 무소속 출마를 선언한 가운데 민주당에

준노 전 문재인 대통령 후보 노동특보, 서동용 전 문재인대통령 후보 법률인권특보, 권향업 청와대군 형인사비서관 등 4명이 공천경쟁을 벌이고 있다.

중앙당은 서 후보의 경우 옛 국민당 당시 민주당 비난 등의 해당행위에 대해 고심중인 것으로 알려졌고 당직자 출신인 권향업 후보에 대한 여성 전략공천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손학규 “안철수계 셀프제명…당적 변경은 원천무효”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19일 안철수계 비례대표 9명의 이름바 ‘셀프 제명’과 관련해 “명백한 불법이며 해당 의원의 당적 변경은 원천 무효”라고 말했다.

손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 우리 당 의원들이 의원총회를 열어 비례대표 9명의 제명안을 의결한 것에 대해 당대표로서 깊은 유감”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바른미래당은 앞서 정당법 제33조(국회의원 제명)가 ‘당헌이 정하는 절차를 거치는 외에 그 소속 국회의원 전원의 2분의 1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고 명시한 점을 들어 안철수계 의원 9명의 셀프 제명을 반박해 왔다.

전날 제명안을 의결한 이들이 당헌이 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것이다.

바른미래당 당헌 53조는 ‘당 소속 국회의원의 제명은 재적의

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당규 윤리위 16조는 윤리위원회의 제명 징계가 선행돼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와 관련해 손 대표는 “중앙 선거관리위원회에 유권해석을 의뢰했고 국회에서도 이를 통보했다”며 “당을 떠나려면 면밀하게 탈당을 하지, 의원직과 특권을 유지하려는 것은 국민의 동의를 얻지 못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윤석열 검찰이 지켜본다”…여당서 먼저 나온 검찰 경계령

집권여당과 검찰의 전례없는 갈등관계에 총선이란 중대변수가 더해지며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총선 후 검찰 수사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자칫 선거법 위반 사례가 나올 경우 총선 이후 검찰에 불복이 잡힐 수 있다는 위기의식에서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야당이 아닌 집권여당에서 검찰의 선거법 관련 수사에 대한 공개적인 경계령이 나오는 이례적인 상황도 나온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지난 1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들리는 바로는 선거가 끝나고 검찰의 대대적인 수사가 있을 것이라고 한다”며 “대상이 되지 않게 모든 후보가 선거법을 철저하게 준수해서 모범적인 선거가 이루어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최근 윤석열 검찰총장의 벌언을 의식한 대응으로 풀이된다. 윤 총장은 지난 10일 21대 국회의원 선거 대비 ‘전국 지검장 및 선거담당

부장검사 회의’를 열고 ‘선거법죄에 엄정하고 단호하게 대처함으로써 선거에서 공정한 경쟁질서 확립하는 데 만전을 기해주길 부탁한다’고 강조했다.

윤 총장은 “이번 선거는 선거연령 하향,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등 변화된 선거제도 하에서 치러지며 개정 협소법 시행 등 형사사법 절차의 변화도 예상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과거의 선거에 비해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라 고도 강조했다.

검찰은 △금품수수 △여론조작 △공무원과 단체 등의 불법적인 개입 등 3대 중점 단속 대상을 설정했다.

이번 총선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된 개정 선거법이 적용되는 첫 총선으로, 비례의석수 확보를 위한 위성정당이 우후죽순 생겨나며 정당수가 크게 늘었다. 1m 길이의 비례대표 투표용지가 나올 것이란 우려가 제기될 정도

로 ‘깜깜이’ 선거 전망이 우세하다.

그만큼 유권자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이에 따라 선거운동 과정에서도 선거법 위반이나 금품선거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후보단일화 관련 매수·결탁, 선거구 재조정에 따른 사조직 동원 등 선거브로커 활동, 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련 금품 제공 등이 검찰의 집중 단속 대상이다.

검찰의 강경한 태도에 민주당도 긴장하는 분위기다. 지난해 조국 사태 이후 전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검찰과 거칠게 대립해온 민주당 입장에선 검찰에 빌미를 줘서는 안 된다는 결기가 느껴질 정도다.

실제 이번 선거의 민주당 ‘간판’으로 공동 상임선대위원장장을 맡은 이낙연 전 총리는 선거사무소 방문객에게 나눠준 마스크를 사용 후 다시 회수하기도 했다.

뉴스1

호남신문 광고안내

광고주는 언론 종사자와 더불어 신문산업 발전의 동반자입니다.
한 분 한 분을 소중하게 여기고 단 한 줄의 광고도 감사히 지면에 반영하겠습니다.
믿고 맡겨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대에 신뢰로 보답하겠습니다.

기사제보 ☎ 062) 971-7400

광고 직통 224-5800

팩스 222-5547

호남신문 공익 캠페인

“딱 한잔만 마셔도
음주운전
입니다”



한 잔만 음주를 해도 운전대를 잡지 않고 전날 파워 하거나 늦게까지 음주를 한 사람은 다음 날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출근을 하는 등 안전한 운전문화를 만들어나갈 수 있도록 다 함께 약속해주세요